평화재단 제69차 전문가포럼

PEACE FOUNDATION 69th FORUM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와 북일 접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14. 9. 18 (목) 오후 2:00 – 5:0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프로그램

일본 아베 정권의 행보와 북일 접근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사 회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
14:20	발표 1	**아베 정권 대아시아 정책방향과 한일관계의 진로**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14:40	발표 2	**북일 관계 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15:00	토론 1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15:15	토론 2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5:30	휴 식	
15:45	질의응답 (발표자, 토론자)	
16:40	전체토론	
17:00	폐 회	

차 례

여 는 글 ····· 4

발 표 1 **아베 정권 대아시아 정책방향과 한일관계의 진로** ····· 5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발 표 2 **북일 관계 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 30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여는 글

일본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권의 우익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영토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해석개헌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거점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를 둘러싸고 일본은 '보통국가'를 지향할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격앙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웃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로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데 지혜를 모으는 동시에 동아시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북일관계의 진전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여 있고, 한일관계 또한 껄끄러운 상황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도모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대일 외교도 확실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최근 일본의 일련의 행보와 함께 대북 접근의 함의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9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발 표 1

일본 아베 정권의 아시아 외교정책과 국내외 정치환경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 목 차 –

1.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한·중·일 관계
2. 아베정권 '가치관외교'의 함의
3. 집단적 자위권도입과 그 영향
4. 아제 9.3개각과 일본회의
5. 한일관계: 해법은 있는가

1.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한 · 중 · 일 관계

동아시아 패러독스(East Asian Paradox)로 표현되는 것처럼,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 · 일, 한 · 일 간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더욱더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2013년1월)가 "발칸화하고 있는 동아시아"로 첫 제목을 붙일 정도로, 역사갈등과 도서영해 분쟁은 역내 국가 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애국심, 민족주의, 국가 위신, 에너지와 어업자원 확보, 국내정치 역학 등이 겹쳐지면서 정치리더와 외교부처간 대립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 신문과 방송, NGO단체가 상호간 비판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갈등은 강대국간 파워시프트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장기화, 제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10년 중국의 GN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일본에서 중국으로 세력전이(power shift 또는 power transition)는 일본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낳게 하였고,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G2체제의 등장은 곧 동아시아 지역내 중국의 헤게모니 확산을 의미하면서,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中國夢)은 제1, 2도련선(島鏈線)으로 해양진출, SCO 상하이협력기구, AIIB 아시아인프라은행, CICA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구상, 중한 밀월관계 구축 등을 통하여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전략 강화와 군비증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무기수출 3원칙의 사실상 폐기, 한·중·일 NSC체제로의 돌입은 군비경쟁과 국지적 분쟁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국이 개입된 동북아 영토와 영해를 둘러싼 대립, 방공 식별구역 설정을 둘러싼 영공문제는 지역질서 우위 선점을 향한 국익추구와 경쟁심리가 강하게 투사되면서 대립 양상이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에 있어서 영토문제는 이미 서로 간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전후 질서의 수립과정에서 영토문제 원인을 제공하였고, 오늘날 초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균형자, 조정자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에로 복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외교정책과 군사적 프레젠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 상태하에서 2020년까지 무려 4,500억 달러에 이르는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동맹국 순방시에 그저 한미, 미일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쳐 실망감을 자아냈다. 국내외적 요인에 기인한 역사·영토 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이 반복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으로서 설정된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문제, 강경론과 온건론을 반복하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주장, 우익정치가 그리고 교과서와 매스컴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 국지전도 불사하지 않는 중국과 동남아 각국간 도서 분쟁은 유럽연합의 통합수준과 비교할 때,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가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현주소를 여실히 노정시키고 있다.[1)]

한편, 불명확한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정책과 집단적 자위권 대두는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오바마 정권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도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드러난 미국의 한계는 과연 미국이 동아시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각국정부와 지식인들의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후체제 탈피를 기치로 내걸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국방군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을 통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함으로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가 발행하는 각국 군사력보고서인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2012년 동북아 군비경쟁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이다. 동북아 역내 군사력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258만 중국군, 120만 북한군, 65만 한국군, 24만 자위대, 합계 약 467만명의 병력이 상호 대치한 상태이다. 각국의 국방비가 급증하면서 중국 1,293억달러, 일본 545억달러, 한국 282억달러를 더하여 약 2,120억달러(북한 제외)에 달했다. 약 20만명 해외미군가운데 주한, 주일미군 2개국내 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럽전체 약 8만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 군비경쟁과 분쟁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달리 동북아내 집단안보체제의 부재로 인한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2010년12월 현재, 해외 주둔중인 미군의 규모와 지역을 정리한 내용이 〈표1〉에 나타나 있다. 독일이 가장 많은 5.4만명이며, 이어서 일본,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과 한국내 주둔중인 미군숫자를 합치면 약 6만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독일내 미군의 숫자를 웃돌고 있다. 이어서, 이탈리아 9,779명, 영국 9,318명를 제외하면 기타 국가는 1,500명 이하로 나타났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해외미군은 61만명에서 30만명으로 절반이하로 줄었다. 특히 독일은 통일이후 미군숫자가 1/4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주한, 주일미군은 각각 1.1만명, 1.7만명씩 줄어들었다,

1) 양기호 서평(2014, 여름) “고봉준·이명찬·하도형외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2014년)” [영토해양연구], pp.206-207.

<표1> 해외주둔 미군의 국가별 통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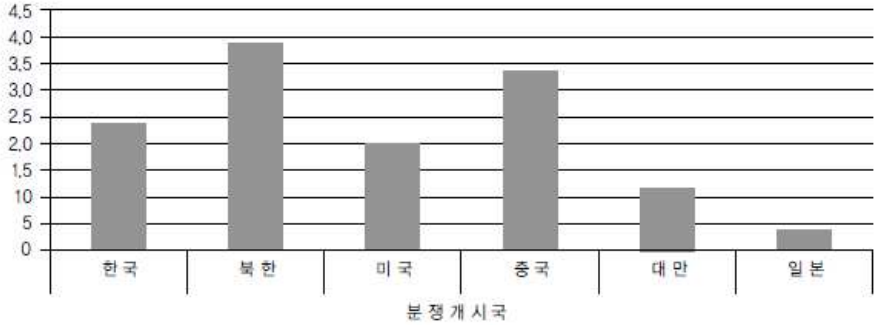
국가명	미군 숫자	
	1990.09.30	2010.12.31
독 일	227,586명	54,431명
일 본	46,593명	35,329명
한 국	41,344명	24,655명
이탈리아	14,204명	9,779명
영 국	25,111명	9,318명
터 키	4,382명	1,485명
바레인	682명	1,401명
스페인	6,986명	1,345명
벨기에	2,300명	1,248명
지부티	11명	1,373명
해외미군 합계	609,422명	291,651명

〈그림1〉에 나와 있는 1950년~2001년간 동북아국가들의 분쟁도발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계상 본다면, 동 기간동안 북한이 총 39회 분쟁을 개시하여 가장 호전적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중국이 33회, 한국 24회, 미국 20회, 타이완 11회, 일본 4회 분쟁을 도발하였다). 이들 분쟁은 대부분 영토에 관련된 것이다. 동북아지역내 분쟁수준에서 가장 적대수준이 높은 전쟁이 57회, 무력사용이 253회에 달한다. 무력시위는 66회, 무력위협은 4회로 기록되었다. 분쟁의 타결방식에서도 분쟁 발생건수 380건가운데 306건이 미타결, 협상에 의해 타결된 분쟁은 41건, 분쟁승리에 의한 일방적 타결은 25회에 이른다.[3)]

동북아국가간에 양자간 국제분쟁의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제무대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남북한간 분쟁과 갈등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거나 한일간 위안부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쟁점화되는 것, 중일간 영토와 역사갈등이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일 양국간 과거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영국내 중국대사와 일본대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서로 얼굴보기 싫어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벌인 것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4)]

2) 林博史(2012.10).“米軍基地の世界ネットワークのなかの日本·沖縄”,「平和運動」, 500号.
3) 이진명(2013). “동북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분쟁: 상생 또는 동상이몽” [국제정치논총] 53(3), pp.89-91.
4) 위의 글.

<그림1>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분쟁도발(initiation)수, 1950-2001



2. 아베정권 '가치관외교'의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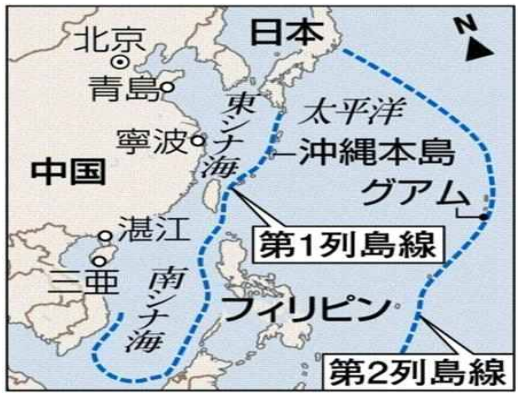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G2체제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지도자인 덩샤오핑과 장쩌민은 도광양회(韜光養晦)정신으로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을 추구하였다. 2000년대 들어 후진타오 주석은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나서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크게 높였다. 이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G2체제에서 중화부흥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을 착착 추진해가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비 증강, 대양해군으로 확장과 태평양 진출로 가시화되고 있다. 2012년11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등장, 12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의 등장, 2013년1월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한중일 3국은 거의 동시기에 새로운 외교관계로 진입하였다. 약 1년8개월이 지난 지금, 미·일동맹 강화, 일본과 한·중관계가 악화된 반면, 미·중과 한·미관계는 양호상태로, 한·중관계는 밀월조짐까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초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이었던 류화칭(劉華淸)이 국방계획으로 제시한 제1도련선(島鏈線)[5] 은 센카쿠,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등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국의 동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 구암, 미크로네시아, 파라오,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해를 포함한 태평양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의미하면서 중국의 대양진출을 상징하고 있다. 중국해군의 함선이 훈련, 작전 등의 이유로 중국남부에서 출발하여, 오키나와 본도

5) 일본에서는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제2열도선(第二列島線)이라고 부른다.

와 미야코지마(宮古島) 해역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6)]

<그림2> 중국의 제1, 제 2도련선



중국의 대외팽창에 대하여 공세적 현실주의자인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미중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중국 군사견제론을 주장한다.[7)]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등, 일본 우파지식인들도 현재 중국이 전전 일본제국주의와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 위협론의 근거로 중국의 해양진출과 분쟁도발, 과거 20년간 23배나 국방비 증가하였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무차별 자원획득, 언론통제하면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 한국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에서도 뿌리 깊은 대중불신에 기초한 대중견제와 동북아내 군사적 균형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을 1930년대 일본관동군에 비유하거나, 아베수상은 유럽 정상회담에서 중일관계를 1914년 제1차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관계로 들면서 분쟁가능성을 시사하였다.[8)] 중일간 갈등과 분쟁요

6) 防衛省防衛研究所(2012). [中国安全保障レポート]. p.38
7) John Mearsheimer(2006, April).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8) 2014년1월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제44차 연차총회에서 아베수상은 현재 중일관계는 제1차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 관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당시 영독은 강력한 경제교역 관계에 있었으나 전쟁을 막지 못했으며, 현재 중일양국 관계가 매우 비슷

인으로 세력균형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미중 G2체제와 중일간 파워시프트 이론, 둘째, 중국 지도부내 권력투쟁, 일본 우경화, 여론의 반일·반중 정서, 하시모토 오사카시장과 같은 지방단체장 포퓰리즘, 정치체제 차이로 인한 국내정치 요인론, 셋째, 집단적 기억, 민족주의, 국가정체성 모색이 근본원인이며, 여기에 역사논쟁과 도서분쟁이 작동하고 있다는 구성주의 이론을 들 수있다.[9)]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을 입안한 커트 캠벨(Kurt Campbell)에 따르면 아시아로 회귀(Pivot to Asia)가 적극적인 대중국 전략이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말 선거공약으로, 중동문제가 안정되면 미국의 군사력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다분히 전략적인 메세지를 발신한 것이었다. 이미, 민주당과 공화당을 포괄한 초당적인 미국의 아시아정책 전략지침서로 나온 제1차 아미티지 보고서(2000), 제2차(2007) 아미티지 보고서는 중국에의 군사적 견제, 일본중심의 아시아정책, 대북제재에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강조하고 있었다.[10)]

미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해양세력(maritime power)이며, 미국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에 깊이 영향력을 투사하는 역외균형자(offshore balancer)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미국내 일본중시 해양주의자 vs 중국 중시 대륙주의자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서, 한미일 협력을 통한 적절한 중국견제를 강조한다. 해양국가인 일본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미국관점에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가이며, 미일동맹은 아태지역의 이익수호 라는 점에서 미국인의 DNA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19세기말 지정학의 대가이자 미국 해군대학 학장이었던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11)]은 미국의 대양해군 창설을 주장하면서 해상교통로의 방어를 위한 아태지

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베 발언은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9) 서승원(2014).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관계” [일본연구논총 39호], pp.153-186.

10) 이용인외 편저(2014).“커트 캠벨Kurt Campbell과의 인터뷰”,[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창비), pp.25-29. 동시에 그는 아시아 회귀가 반드시 대중 견제용 군사전략이 아니며, 중국을 더 많은 대화의 장에 끌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어야 하지만, 아베정권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제 자리를 못찾고 있다고 지적한다.

11) Alfred. T. Mahan(1898),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지정학과 해양세력이론)]을 참고할 것.

역 시레인 확보, 파나마운하 건설, 하와이합병 등을 주장하였다. 스파이크맨(Nicholas Spykman)도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인 림랜드(Rimland) 부분을 국제정치에 있어서 권력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쪽으로 중국 연안부, 인도양, 유럽해양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세계전략으로서 싱가폴, 필리핀, 홍콩 등의 남지나해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기지확보 등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12]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국익이나 세계전략 측면에서 시레인 확보와 기지 유치는 대륙세력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일동맹과 미군기지, 일본의 자위대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2006년11월 아베 제1차 내각에서 아베수상과 아소외상은 가치관외교를 주장하였다. 가치관외교는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잇는 중국 봉쇄 해상방어선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판 NATO를 모델로 한 대중국 견제용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정권은 제1차 내각에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시장경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관외교를 내세우며, 유라시아 대륙의 외연으로 확대시켜 간다는 대중국 포위망 전략을 내걸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 등, 동북아에서 시작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 중앙아시아, 중부와 동유럽, 발트지역에 이르는 대륙과 해양세력간 접점을 포섭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국가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협의해 간다는 것이다.[13]

제2차 아베내각에서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치관외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 필리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sea lane을 포함한 경제와 안보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2013년1월, 아소 부총리의 미얀마 방문, 아베수상의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방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베 아베수상은 아베독트린[14]을 발표하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가치의 정착과 확대를 위하여 아세안과 협력한다, 법의 지배하에 개방된 해양은 공공재이며, 아세안과 공동으로 이를

12) Nicholas J. Spykman(1942).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ew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3) 서승원(2014). "시진핑과 아베 신조의 중일관계" [일본연구논총](39호), pp.169-170.

14) 2013년1월18일 아베수상은 동남아 마지막 방문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외교 5원칙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세안 각국과 경제와 에너지, 해양안보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지키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중시를 환영한다, 다양한 경제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본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모색한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키우고 미래세대간 상호이해를 촉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가치관외교는 전략외교로도 불리우고 있다. 일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심지어 북한미사일 발사에 앞서서 핵개발 거점이나 미사일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외교에는 국가간 갈등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근저에 정착되어 있다. 역사화해와 신뢰구축을 통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보다도, 자국의 군사적인 안전보장에 우선 순위을 두면서,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 등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국방능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미일동맹과 자위대 방위력 증강, 국가안보전략과 신방위계획 대강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무기수출3원칙 사실상 폐기 등은 이러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베의 가치관외교, 전략외교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축은 미국(하와이), 일본, 인도, 호주를 잇는 '안보다이아몬드 구상'(Security Diamond)이다. 2014년7월 아베수상은 호주를 방문하여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미국도 호주에 약 2,500명을 상시 주둔시켜 미군의 전진배치라는 인상을 확산시켰다. 일본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시레인을 방어하려는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에 따라, 양국은 2014년9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표방하였고, 일본정부는 인도가 사실상의 준동맹국으로 격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15] 여기에는 가치관외교의 입안자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회의NSC 국장, 인도 모디 수상 측근인 아지드 드발 국가안보고문이 배석하였다.[16]

---

15)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핵심'이라 할 중국 견제와 관련, '온도 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간 미묘한 입장차이는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양국 외무·국방장관 연석회담(2+2) 창설 방안이 명기되지 않은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정상회담 전 일본 언론은 '2+2' 창설이 이번 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는 "외무·방위 대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2일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인도의 사정이 배경에 있다"며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분쟁이 있지만 양국간 무역액은 일본-인도 무역액의 4배 가까이 된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인도에 중국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달 중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점이 2+2 관련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중국 견제라는 안보과제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묶인 중국을 자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 모디 총리의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9월2일 연합뉴스 보도내용.
16) 2014년9월2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의 보도내용.

<그림3> 일본의 다이아몬드 안보협력 구상

아베수상은 취임후 2013년초부터 영국,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관계를 강화시켰다. 그는 취임 5개월간 10개국을 방문하였으며, 12개국과 정상회담을 이어갔으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5회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ODA 1.4조엔을 약속하였다. 일본정부는 엔차관과 ODA를 무기로 베트남, 미얀마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중인 필리핀으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재무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얻어냈다. 기시다 외상도 뒤를 이어서 필리핀, 싱가폴, 브루네이 등을 잇달아 방문하였다.

아베수상은 2014년6월24일 수상관저에서 필리핀 아키노대통령과 회담하였다. 동지나와 남지나에서 각각 대립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안보면에서 양국간 연계를 강화해간다는데 일치하였다. 아베수상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한데 대하여, 아키노대통령은 남지나해 도서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을 상대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아베수상은 국제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지지하면서, 무력에 의한 위협은 용인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필리핀은 해상경비능력을 높이고자 일본으로부터 해양순시선을 조기에 공급받기를 기대하고 있다.[17)]

일본은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중국 견제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제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관계에 있고, 러시아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극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중

17) 2014년6월24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내용.

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러일관계를 강화고자 하였다. 2013년4월 아베-푸틴간 러일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조약 문제 이외에 경제와 에너지협력의 확대, 2+2 외교·국방 장관협의회 설치 등에 합의하였다.[18]

차기 수상감으로 손꼽히고 있는 안보전문가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현 지역창생담당대신은 더 나아가서 동남아 각국과의 군사동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필리핀, 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장래에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허브와 스포크형(hub & spoke) 동맹에서 나아가 서로 연계되는 네트워크형 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은 돌출한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안보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19]

중일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내 지일파의 일본방문이 빈번해지고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유력후보인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포함하여 2014년8월까지 무려 54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중국의 대두를 배경으로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집중적인 일본방문은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까지 매년 10여명 정도였으며, 2013년 26명이었지만, 2014년8월 현재 54명으로 이미 작년의 두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20]

3. 집단적 자위권도입과 그 영향

집단적 자위권(Collective Self Defense)은 유엔헌장 51조에 규정된 것으로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 헌법의 해석변경을 통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어디까지나 내정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유엔헌장 53조는 독일, 이태리, 일본을 전범국 경력을 지닌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반성, 중국, 한국과의 화해를 통한 일본의 진정한 아시아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집단안보 체제가 갖추어지지

18) 최태강(2013)."아베시대 러일관계: 영토교섭의 해법은 있는가?" [슬라브학보] 28(4), p.472.
19) 薬師寺克行(2014). "石破茂との対話" [ナショナリズムと外交] (講談社), p.183.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정조회장과의 인터뷰.
20) 2014년9월1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의 보도내용.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갈등과 분쟁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는 경계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아베 1차내각, 2차내각에서 집요하게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7년과 2013년 만들어진 안보법제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인위적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두 기구 모두 평화헌법 9조가 개별적 자위권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2007년5월에 나온 제1차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4개 유형으로서 공해상 자위함과 나란히 항해중인 미함선이 피격시 반격, 제3국이 미국에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 방위체제(MD)로 요격, PKO활동에 참가중인 타국에 대한 무기수송 등 후방지원, PKO활동에서 임무수행시 기뢰 등 방해물 제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은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1969년3월 내각법제국장 답변, 1972년10월 참의원자료, 1985년9월 정부답변서에서 해외에서 타국을 방위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상 금지되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다른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1981년5월 스즈키내각의 정부답변서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나 현행 평화헌법하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997년 미일간 신가이드라인(미일방위 협력을 위한 지침)은 유사시 일본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미군의 군사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과 기본방침을 밝히고 있다. 2001년5월에 나온 정부답변서도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신중하고 부정적인 자세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2007년2월 제2차 아미티지 보고서가 동맹파트너로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5월 아베1차내각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1차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12월 제2차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열렸고, 여기서 아베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른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공헌을 강조하였다. 2014년5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 2차보고서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2014년 7월 해석개헌에 따라 각의결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존 입장을 완전히 번복한 내각법제국은 각의결정에 대한 '의견없음' 서류를 송부함으로서 평화헌법 9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전후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을 사실상 주도한 것은 아베정권과 일본외무성이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 13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공헌이 없다는 이유로 비난받은 것은 일본외교의 트라우마로 각인되었다. 이후 일본 외무성내 안보파 그룹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 자위대원인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국회의원, 외무성관료인 국가안보회의 야치 쇼타로 국장, 가네하라 노부가쓰 (兼原信克)차장 등도 이에 가세하였다.

제2차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 보고서]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무력사태대처법 개정 등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달했으며, 주일 미군과 공동작전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 도입되면, 외국군대의 경호, 자국민 대피시 미군함정 경호가 가능해지고, 유사시 일본인 보호를 명목으로, 구출을 위한 군용기 등 사용도 가능해진다. 일본정부는 현행 자위대법 84조3항에 일본인 구출을 위한 항공기, 함정, 차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2〉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8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든 것이다.

<표2>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필요한 8개 사례**

▷일본인 피난민 수송중인 미국함정이 피격시 방위
▷제3국의 미사일 발사를 경계중인 미국함정을 방위
▷무력공격을 받은 미군함정을 방위
▷미국본토가 피격시 미군함정을 방위
▷적국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박을 강제 임검
▷소해정이 기뢰제거 활동 참가. 유엔 결의후 집단안전보장도 가능
▷미국본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요격
▷민간 상선대의 공동방위

⇓

무력행사 3개 조건[21)]

일본에 명백한 위협,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최소한 자위권 발동

⇓

정부 판단후 기본방침 작성, 행사여부를 각의결정

⇓

(원칙상)사전 국회동의를 받은 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정부의 각의결정은 이밖에도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결의에 따른 집단안전보장 관련 무력행사를 각의 결정문에 담지 않고 '문답집'에 삽입시킨 것은 향후 추가적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안보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센카쿠분쟁을 염두에 둔 '회색지대 사태인 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 시, 자위대 출동 절차를 신속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전투현장외 후방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014년7월14일, 중의원예산위원회 외교안보정책 집중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수상의 추가 발언을 통해서 본 집단적 자위권 범주는 매우 구체적이다. 아베수상은 "중동 해협봉쇄로 원유 공급난을 겪는 것은 일본정부와 국민에게 명백한 위협이며, 따라서 기뢰제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존립 위협에 석유파동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며, 지나친 비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동의 없이 상시적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이 가능한 항구법 제정 검토", "한반시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은 일본과 사전협의가 필요"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에 비판적인 중국과 한국 견제용으로 간주되었다. 이 밖에도, "자위대 기뢰제거 과정에서 유엔의 집단안보 결정에 따른 무력행사 가능", "남지나해에서 분쟁발생시 자위권발동 대상이 아님" 등은 구체적인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나타낸 것이었다.

2014년7월13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대신은 연말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관계를 혁신적으

21)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새로운 3개 조건(新3要件)을 말한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 및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명백한 위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 최소 한도의 실력 행사로서 자위권 발동이라는 3개 조건이다.

로 바꿀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미 자민당은 독자적인 국가안보기본법을 제정하고자 2012년7월 초안을 작성하였다. 헌법개정에 따른 부담을 덜고, 개별법마다 내각법제국의 법률심사를 줄일 수 있고, 의원입법으로 추진 가능한 법률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2014년말까지 미일가이드라인(War Manual)이 개정되면, 2015년 상반기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PKO법, 무력사태대처법 등, 10여개에 이르는 주요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아베수상은 9월3일 개각에서 안보법제 담당대신을 신설하였으며, 방위대신이 겸직하게 되어 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심지어 도쿄 신주쿠에서 "집단적자위권 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반대"를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한 사례까지 있었다. 2천명의 일본시민이 수상관저 앞에서 데모를 벌였고, 헌법9조 지킴이 모임,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평화헌법 왜곡, 입헌주의 일탈로 비난하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도 헌법개정 이전에 해석개헌을 시도한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이 도입되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71%에 달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언론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이 반대하였으며, 산케이신문, 요미우리는 찬성, 닛케이신문은 신중한 입장에서 찬성론으로 돌아섰다.

한국정부는 공식입장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 평화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운영될 것, 한반도 영해내 당연히 한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국회는 즉각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하고,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일본의 시도는 중국 포위망 구축에 불과하며, 중일 양국간 분쟁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7월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대일견제를 위한 한중 역사연대를 가속화시키고자 하였다. 러시아도 비판적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베정권을 주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미국, 유럽, 호주, 인도, 필리핀 등은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였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역사적으로 개정될 것이며, 향후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22]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것은 1978년 책정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약간 차분한 입장을 보였다. 다니엘 러셀(Daniel R. Russel)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미국무차관보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국의 동맹국가이며,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국민과 동북아 각국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미국은 환영하나 일본에 강요한 것은 아니며, 어떤 형태인지, 실시방법이나 내용은 일본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23]

4. 아베 9.3개각과 일본회의

2014년9월3일 일본 아베수상은 취임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하였다. 내각과 자민당 요직에 측근을 대거 포진시켰는데, 내각 19명 가운데 무려 15명이 일본회의라는 우익단체에 속한 현직의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각은 1년8개월만으로 무려 617일간 각료 교체가 없었던 전후 가장 최장 내각이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베테랑과 중견의원 간 균형과 안배에 주안점을 두면서 각료 18명 중 12명을 새로 임명하였는데, 특히 여성장관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주요 보직인 관방장관, 재무대신, 외무대신, 경제재생대신 등 핵심간부는 그대로 유임되었다. 중요한 포스트인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장관이 위기관리능력, 안정감, 균형감각을 인정받아 유임되었으며, 아베정권의 균형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시되어, 재계와 아베정권간 유착이 두드러졌다.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올리면서 지역경제 회생, 원자로 재가동 여부 결정, 연말까지 10% 소비세인상 판단, 미일간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 협상 등의 난제를 풀기위한 포진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 사카키바

22) 2014년7월13일 한국일보 보도내용.
23) 2014년9월8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보도내용.

라 사다유키(榊原定征)회장은 경제재생에 기대하며, 새로운 아베 내각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후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연말 미일가이드라인 방위협력 지침, 내년 상반기 관련법률 개정 작업을 맡을 방위대신에 중의원 안보위원장, 방위부대신 등 을 맡아온 에토 아키노리(江渡聡徳) 중의원의원이 임명되어, 안보법제 담당대신을 겸임하게 되었다. 여성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오부치 유코(小渕優子) 경제산업대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을 총무대신에 임명하였다. 간사장에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전 자민당총재를 기용하여 올해 11월 예정된 오키나와 현지사 선거,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당체제 정비를 맡긴 것도 주목할 만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수상감 1순위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쇠퇴위기에 몰린 지역재생을 맡을 지역창생 담당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자민당원내 인기가 높은 정치적 라이벌을 내각에 입각시킴으로서 아베정권의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성인사의 등용이 대부분 우파정치가를 기용했다는 점에서 한·일간 갈등 여지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부치 유코 전 저출산고령화 담당대신을 경제산업대신에 기용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골수 우파정치가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을 총무대신에 임명한 것,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참의원 정책심의회장을 납치문제 담당대신, 이나다 토모미(稲田朋美) 의원을 정조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여성대표성을 내세우면서 우파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킨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신임 각료 중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망언을 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대신은 고노담화 폐지를 주장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계속해서 부정해 온 우익정치가이다. 앞으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지자체에서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방치하거나, 총무성 관할인 방송언론 분야에서 언론탄압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다카이치는 NHK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긍정적인 멧시지를 발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나다 토모미 정조회장도 2011년8월 독도 방문을 시도했던 우익인사이며,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문제담당 대신은 대북제재를 주장하고, 독도반환으로 전후체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또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항의코자 미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으며,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하다.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신임 부흥대신도 한국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을 "다케시마가 속한 시마네현 국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지역창생 담당대신도 "고노담화의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새로 기용된 12명 각료가운데 무려 9명이 '일본회의' 출신으로, 이제 19명 각료 중 무려 15명이 '일본회의' 출신으로 채워졌다. 원래 1997년 헌법개정과 핵무장을 주장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우익 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져 출범한 것으로 극우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회의는 재계, 종교계, 학계, 정계, 관계 등에서 광범위한 우익인사들이 결집하여, 황실 지키기 운동, 전통과 역사중시, 헌법개정, 교육정상화를 통한 애국심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와 영해 지키기, 야스쿠니 참배하는 국회의원 회원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으며, 심지어 여성천황 반대, 동성애 반대 등 보수적인 색깔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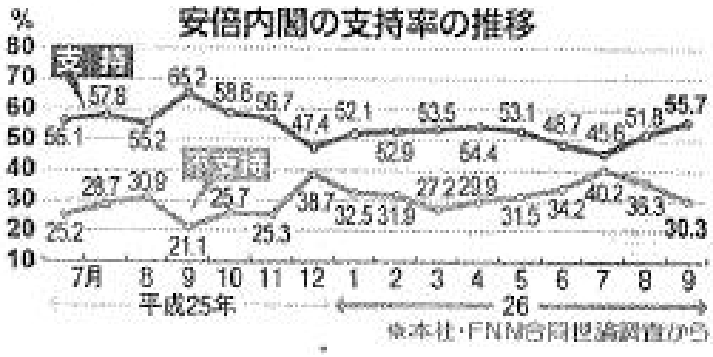
일본회의 산하에 설치된 국회의원 간담회는 현역 국회의원이 참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민당의원으로 289명이 가입해 있다. 회장인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는 A급전범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一郎) 전 수상, 추밀원의장의 양자이다.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수상은 특별고문이며, 아베 신조 이시바 시게루 부회장, 교과서 역사왜곡, 영토도발 앞장선 우익인사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무과학대신이 간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우파성향을 금방 알 수 있다. 2007년 아베 1차내각에서도 일본회의 출신 대신은 7명에 불과했지만, 내각과 당내 요직에 진출하면서 무려 2배로 늘어나, 개각후 요직은 대부분 일본회의 출신으로 채워졌다.

친중파인 다니가키 전 자민당총재의 간사장 임명, 중국통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 최근들어 중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대신이 임명된데다, 동아시아외교를 강조하는 히로시마 지역구 출신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도 그대로 유임되어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중일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개각을 통하여 최대 외교현안으로 한일, 중일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대항마인 이시바 시게루의 인기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당원 투표에서 상대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아베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입각 대기조로 불리는 중의원 5선, 참의원 3선 이상 가운데 각료 경험이 없는 50여 명의 의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毎日)신문 인터뷰에서 “앞으로 중요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각료 실언 등의 문제가 생기면 내부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산케이신문사와 후지텔레비젼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개조후 아베내각 지지율은 55.7%로 약 1개월 전보다 3.9% 높아졌으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30.3%로 나타났다. 아베내각이 가장 많은 5명의 여성각료를 기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는 비율은 64.1%, 평가하지 않는다가 30.2%이었다. 안보법제 담당대신 신설에 대한 평가 66.2%, 지방창생 담당대신은 71.6%, 여성활약 담당대신은 64.7%가 평가한다는 응답이었다. 한·일, 중·일간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2.5%, 54.5%로 나타났다. 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각각 43.6%, 39.8%이었다.[24)]

<그림4> 아베내각 지지율의 변화(2013~2014)



24) 2014년9월8일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의 보도내용.

5. 한일관계: 해법은 있는가

미·중간 G2체제의 본격화, 동북아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각축전이 전개되고, 다양한 국제변수가 중층적, 복합적으로 누적되면서 한국외교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안보전략은 고민이 깊어지고,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천안함사건 이후 대북제재인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관광 중단, 한미 공동군사훈련이 반복되면서 관계 개선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할 만큼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 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치 양보없는 경색국면으로 이미 국제적인 쟁점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북일간 납치문제를 매개로 한 교섭재개, 북·일,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국정부와 외교가에 초조함과 위기의식, 방향상실과 대안부재의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박근혜정부의 초기 외교정책이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1965년 한일수교 이래 최악에 빠진 한일관계는 관계 개선의 방향이 가시화되고 않고 있다. 2012년8월 이명박 전대통령의 독도방문, 방한시 반드시 천황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 일본국력이 저하되었다는 발언은 일본내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2013년1월 정권교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였던 양국내 목소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색된 대일 원칙외교로 인하여 별다른 변화와 성과를 낳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제94주년 3.1절기념식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불변'이라거나, 작년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직시 용기와 상대방의 배려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갈수 없다'는 발언, 또한 올해 2014년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정부를 향하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역사중시 노선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었다.

2013년4월 일본정치가의 야스쿠니신사 대거 참배에 따라 한일 일본외교장관 회담이 취소되었고, 5월 인도에서 개최예정이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도 연기되었다.

9월 러시아 G20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었고, 10월 인도네시아 APEC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마저 무산되었다. 11월 한중일 정상회담도 무산됨으로서 한미, 한중, 한러 정상회담 2회이상 개최에도 불구하고, 1년8개월 넘게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정권출범 1년8개월이 넘도록 한일관계는 최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양국관계가 냉전 분위기라거나, 한국의 대일외교 부재가 지적되었다. 한일 갈등의 기존 주제인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 참배, 독도영유권 분쟁에다,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한국사법부 징용배상 판결,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추진, 고노담화 재검증, 재특회 혐한 활동,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과잉보도로 인하여 한일 양국간 해결 방법을 더 찾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위안부문제이다. 1992년 정대협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론화하고,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발족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을 넘어 국제적 쟁점으로 확장되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사회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지 20여년,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한일양국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일본과 국제여론간 마찰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내에서도 우익단체들은 위안부를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25)]

실제로 일본우익들이 가장 격렬히 부인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이다. 존재 자체도, 처지도, 고통도, 일본의 사과와 보상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일본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위안부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과서에서 자학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반일 행위이며, 일본을 갉아먹고, 부수고, 녹여서 해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후지오카 노부가쓰(藤岡信勝)에게 있어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1990년대에 조작된 근거없는 스캔들이다.[26)] 심지어, 일본 우익정당인 행복실현당은 2013년12월부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백지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서 13.3만명의 서명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하였다. 일본유신회도 고노담화 폐지를 요구하는 16만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아베정권의 고노담화 재검증 시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여론 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25) 이지영(2014). “일본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5), p.408.
26) 개번 맥코맥(1997). “일본 자유주의 사관의 정체” [창작과 비평사], pp.81-82

문제는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정서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는 전쟁의 기억이 국제사회의 화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저서, [사과하는 국가들: 국제정치에서의 사죄]에서 의미심장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27] 그녀는 동북아 국가간 화해를 위하여 일본이 독일처럼 분명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자행한 인권위반을 해결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 사죄한 사례가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 등 적극적인 과거극복을 시도했던 1960년대 후반 서독의 모델을 따를 경우,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반발로 여론 양극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다. 독일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이며, 일반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위안부문제와 역사왜곡을 둘러싸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2015년 위안부 공동연구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행사 공동 개최를 제의하자 일본 정부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쓸데없이 과거사를 끄집어내 국제문제화 하려는 시도는 지역 평화와 협력 구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28] 55%에 이르는 아베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2015년 가을 총재선거, 2016년7월 참의원선거에서 아베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박근혜정부는 2018년2월까지 임기가 3년이상 남아있다. 앞으로도 이런 상태로 양국관계가 지속된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에 틀림없다.

마치 19세기 유럽 국제정치를 방불케 하는 긴장국면과 분쟁가능성, 동맹과 연대속에서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어떻게 구성해갈 것인가는 그리 쉽지 않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하여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재검토해야하며,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외교가 고립되지 않도록 전시작전권 반환 검토 등, 한일 안보협력과 한미동맹의 공고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관계와 한일관계 개선 등, 외교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에 와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가동시켜야 한다.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식민지 불법성,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독도분쟁, 야스쿠니, 원폭피해자, 사할린동포, 문화재 반환 등, 그 후 드러난 문제점과 미해결이라는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

27) Jennifer Lind(2008).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28) 2004년7월4일 한국일보 보도내용.

여기서는 한일관계의 본격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몇가지 시사점을 던지는 사례를 나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김대중 정부기 한일관계는 최고 상태이었으며, 지금도 한일관계 복원의 모델로 1998년10월 김대중-오부찌 한일파트너십 선언이 손꼽힐 정도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동북아 정세인식은 매우 탁월한 선견지명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였으며, 1965년 한일수교에 찬성한 유일한 야당정치가 이었다. 그는 전후 처음으로 일본의 평화헌법, 비핵3원칙을 높이 평가하였다. 1998년 한일파트너십 선언으로 미래지향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어업분쟁, 교과서왜곡, 위안부문제, 야스쿠니 참배에도 불구하고 한일 안보협력과 정상회담을 개시, 발전시켰다.

둘째, 폴란드의 탈냉전기 외교정책은 한국외교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 준다. 폴란드의 외교정책은 미어샤이머 방식의 공세적 현실주의가 아니고, 상대방의 외교전략과 방위정책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어적 현실주의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폴란드는 동유럽 혁명에 따른 공산정권 붕괴이후, 친러국가에서 친미국가로 변신하였다. 폴란드는 친미파가 주장한 미영중시의 대서양 우선주의자 vs EU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유럽우선주의자간 논쟁을 거쳐서 NATO와 EU가입에 성공하였다.[29] 폴란드는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하면서 2,500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할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켰다. 강대국사이에 끼인 폴란드로서 위기관리와 국익추구를 조화시키면서 방어적 현실주의를 지속시킨 외교력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2003년1월 러·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수상은 러일간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평화조약, 정치대화, 국제협력, 경제와 치안방위, 문화와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토대로 양국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면서 영토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안고 있던 일본외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아베 신조 등, 역대 정권에 걸쳐서 러일간 협력 무드를 승계하였다. 예를 들면, 아베 2차 내각에서 2013년1월부터 6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러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러일양국간 아태지역에서 협력강화가 지역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전략인식의 공유, 영토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일치를 통하여 에너지, 환경, 안보 등 폭넓은

29) 김태형. “방어적 현실주의와 외교정책: 폴란드의 탈냉전기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0집(2012, 2호) [社會科學硏究], p.146.

대화를 추진하였던 러·일관계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30]

그동안 경색국면에 빠져 있던 한일관계도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간 국장급 협의에 이어 조만간 차관급 전략대화도 개최할 예정이며, 안보정책협의회도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으로 연내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포함해 미루었던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정기적으로 열렸으나, 독도와 과거사 갈등,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파동, 아베 내각의 역사·영토 도발 등으로 2009년12월 이후 개최되지 못했다.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 한중일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 회의(SOM), 위안부문제 국장급 협의 등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연내 재개도 추진되면서 한일간 양자관계 복원을 위한 다층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아래의 〈표3〉를 참조할 것).[31]

<표3> 최근 한일관계 교섭 확대내용(2014년 9월 9일 현재)

접촉면 넓히는 한·일 관계

대화 형식	주요 의제
차관급 전략대화	한·일 관계 전반
차관보급 고위 회의	한·중·일 3국 협력·정상회의
국장급 협의	위안부 문제
2+2 안보정책협의회	안보 문제

이에 따라,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중일 간 외교장관 회담, 또는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외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관계개선의 해법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외교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까. 우선 내년 2015년 한일수교 50주년을 어떻게 맞이할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0) 최태강(2013).“아베시대 러일관계: 영토교섭의 해법은 있는가?” [슬라브학보] 28(4) pp.474-476.
31) 2014년9월9일 [매일경제] 보도내용.

발 표 2

북 · 일관계 변화가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5.29 북 · 일 합의'를 중심으로

조양현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 목 차 –

Ⅰ. 북한 5.29 합의와 동북아질서

Ⅱ. 5.29 합의의 의미
1. 5.29 합의의 내용
2. 5.29 합의의 평가

Ⅲ. 5/29 합의의 배경
1. 북한 측 동인
1) 일본 안정 정권과의 납치문제 해결
2) 재일 조총련 보호
3) 국제적 대북공조의 견제
4) 중국 견제
2. 일본 측 동인
1) 국내 정치기반 강화
2) 전략외교 통한 국익 극대화
3) 한 · 중 접근에 대한 견제

Ⅳ. 북일관계 전망.

Ⅴ. 시사점
1. 국제적 대북공조 이완 가능성
2.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
3.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및 남북관계에의 영향

Ⅵ. 정책적 고려사항
1. 전방위 전략외교 추구
2. 한 · 미 · 일 대북공조 강화
3. 남북관계 성과 도출
4. 한 · 일관계 신 패러다임 구축

I. 북일 5.29 합의와 동북아질서

○ 북한과 일본은 해방 후 70년 가까이 국교가 없는 '비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되어 왔던바, 작년 말부터 가시화된 북일접촉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5.29 합의문이 발표되자, 이는 북한 비핵화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킴.

- 북한이 북일 수교의 최대 장애물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이 대북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5.29 합의'가 실현될 경우, 북·일관계의 개선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북일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를 배경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질서의 한 축이자,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과도 밀접히 관련됨.

- 북일 수교는 한반도에서 냉전 요소의 청산 즉,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일환인바, 북일관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됨.

- 반면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왔던 일본이 그 일부를 해제한다면, 국제적 대북공조 및 한·미·일 공조의 이완은 물론 한국의 대북정책의 영향력 상실이 우려됨.

○ 5.29 합의 및 그 후속조치는 2011년 12월 김정은 체제로 이행 이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외교 사례인바,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등 북한 지도부의 급속한 인적 교체가 진행된 상황에서 김정은의 통치능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검증 기회이며,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교섭은 향후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대외태도와 외교행태를 가름할 수 있는 사례임.

II. 5.29 합의의 의미

1. 5.29 합의의 내용

○ 지난 5월 26~28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일 국장급 회의의 종료 직후 현지에서 나온 발표는 양국이 '계속 협의'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였지만, 다음날 평양과 동경에서 각각 발표된 합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가 포함됨.[32)]

- 북한은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납치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일본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조치와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개시할 의사를 밝힘.

-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치문제와 관련한 조사 현황과 처리방향을 일본 정부에 수시로 통보하고 협의하는 데 대해, 일본은 동 위원회 설립 시점에 대북규제조치 및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재일조선인 지위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북 인도지원을 실시할 것임.

○ 그 후 약 한 달 뒤인 지난 7월 1~2일, 양국은 북경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으로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일본 정부는 일부 대북 제재의 해제 방침을 발표함.

- 일본의 해제 조치에는 인적 왕래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등 3가지 분야의 조치가 포함됨. 이로써 일본의 대북제재는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가능했던 2006년 수준으로 복귀함.

32) http://www.mofa.go.jp/mofaj/files/000040352.pdf

<표1>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와 5.29 합의 내용

	현재 제재 내용	북일 합의 내용
교역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금지 (시행 시기 2006년 10월) ·모든 일본 물품의 대북 수출 금지 (2009년 6월)	없음
금융	·대북 송금액 신고의무 상한 인하 =3천만엔→1천만엔(2009년 4월) =1천만엔→300만엔(2010년 7월) ·방북시 현금 반출 상한 인하 =100만엔→30만엔(2009년 4월) =30만엔→10만엔(2010년 7월)	·송금 신고 및 휴대금액 신고에 관해 북측에 대해 취하고 있는 특별한 규제 조치 해제 (구체적 해제 내용은 미정)
교통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2006년 10월) ·일북간 전세 항공편 운항 불허 (2006년 7월)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조치 해제 (만경봉호 불포함)
인적교류	·모든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2006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허종만 조총련 의장 등 조총련 관계자 4명에 추가해 조총련 부의장 5인의 방북 후 일본 재입국 불허 (2013년 2월) ·일본으로부터 북한 입국 자제 요청(2006년 7월)	·인적 왕래 규제조치 해제 (구체적 내용 미정) ·이상 해제는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 설립조사 및 조사 시점
화물검사	·특정화물 적재 북한 선박 및 동 화물에 대한 검색 및 사료 채취 등 조치 가능(2010년 7월)	없음

자료 : 연합뉴스

2. 5.29 합의의 평가

○ 5.29 합의는 북일 수교의 최대 장애로 남아있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이 2004년 이후 10년 만에 도달한 최고 수준의 성과임.

-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납치피해자 5명 생존, 8명 사망사실 확인), 사과 및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얻음.

- 일본 정부는 2002년에 15명을 납치피해자로 규정한 이래 2005년 4월과 2006년 11월 각각 1명을 추가한바, 총 17명의 일본인이 북한 측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북한은 2002년 10월 5명을 귀환(2004년 5월과 7월 이들 잔류가족 8명 귀환)시켰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사망 8명, 비입국 4명'으로 일본에 최종 통보하고 납치 문제의 해결을 선언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2명의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한 북한의 재조사를 촉구하였지만, 북한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응하지 않음.

- 2008년 6월과 8월에 열린 북·일 간 공식실무협의에서 북한은 '납치문제는 해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종래 입장을 바꾸어 납치 재조사에 합의하였으나, 9월에 일본의 정권교체를 이유로 합의 실행을 연기 통보한 후 이행하지 않음.

<표2> **북 · 일 교섭 동향**

- 1991년~2002년 10월, 총 12차례 수교회담 1997년 요코다 메구미 제기, 1998년 대포동 발사 - 2002년, 2004년 납치자 5인 및 가족 일본 귀국 2002년 평양선언 북한 핵개발과 납치문제로 난항 - 2006년 2월 북·일 협의(베이징) - 2007년 3월 및 9월 '2.13 합의'로 북·일관계 정상화 WG 회의 - 2008년 6월 및 8월 1, 2차 북일공식실무협의에서 납치 재조사 합의 9월 북, 일본의 정권교체를 이유로 합의 실행 연기 통보 - 2012년 11월 북·일 정부 간 회담 재개(울란바토르, 민주당 정부) 1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무기 연기 - 2013년 5월 이지마 내각참여 방북

- 2014년 3월 북·일 적십자회담 계기 두 차례 과장급 협의(션양) - 2014년 3월(베이징) 및 5월 26일~28일 (스톡홀름) 두 차례 국장급 협의 5월 29일 북한의 일본인 관련 포괄적, 전면적 조사(납치문제 재조사),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 및 인도지원 등 합의문 발표 7월 1일 북·일 국장급 협의(베이징) 7월 3일 일본 정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정

○ 5.29 합의는 기본적으로 2008년 납치 재조사 합의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에 의한 대북제재 조치의 일부 해제는 북한의 재조사 합의에 대한 보상이자 향후 적극적인 재조사 성과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성격이 있음.

- 5.29 합의 관련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의 매각 건과 만경봉호 입항 문제로 북·일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일본은 이를 납치문제 해결의 압박 수단으로 삼고자 함.

○ 금번 5.29 합의(후자)는 2008년 합의(전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화된 것으로, 구속력 역시 한층 강화된 것임.

- 전자의 조사대상은 모든 납치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상기 12명의 납치피해자 외에 민간단체 추산의 특정실종자 470명, 경찰 추산의 납치 가능성이 있는 860명 등의 납치피해자 외에, 해방 후 북한잔류 일본인과 그 유해, 북송 일본인처 등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담고 있음.

- 조사방법에 있어서 후자는 일본 관계자의 북한 체재를 인정하고 있고, 양국 간의 정보공유 및 의견소통을 보장하고, 각자의 의무를 상호 문서화하여 구속력을 강화함.

III. 5.29 합의의 배경

1. 북한 측 동인

1) 일본 안정 정권과의 납치문제 해결

○ 북한의 대일 접근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했던바, 이는 과거에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한 아베 정권과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국교수립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작년 7월 참의원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아베 총리 재임시기가 납치문제 해결의 호기로 판단하고 일본과의 접촉을 본격화함.

○ 납치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외화 획득 외에, 장기적으로 북일 과거사 청산에 따른 경제협력자금을 기대할 수 있음.

-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국가경제건설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으로부터 원유수입 감소 및 한발에 따른 농작물 흉작 등으로 경제난이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필요가 절실해짐.

2) 재일 조총련 보호

○ 북한이 작년 하반기 이후 대일 접촉을 강화한 배경에는 일본 내 북한 네트워크인 조총련과 재일조선인 보호라는 필요가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임.

-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에서 조총련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압력과 차별이 거세졌고, 최근에는 재일조선사회의 정신적 상징인 조총련 본부 건물과 부지가 경매에 들어감.

- 지난 3월 동경지방법원이 강제매각을 허락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에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 측은 “북·일관계 개선의 기본적인 문제인

조총련 중앙본부청사 매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일관계는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3) 국제적 대북공조의 견제

○ 한편 미·일·중·러와의 균형외교라는 관점에서, 국제적인 대북 압박 특히, 한·미·일 공조에 대한 북한의 견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외관계의 우선 과제는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인바, 이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도 변함이 없음.

-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핵과 경제건설이라는 북한의 병진노선에 대해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였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미·일 공조를 주도함.

-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은 무력 도발로써 남북 긴장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짐.

- 이에 북한은 일본과의 접근을 통해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 공조체제를 약화시키고자 의도했을 수 있음.

4) 중국 견제

○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북한은 일본, 러시아 등 타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 등으로 북·중관계가 경색되면서 양국관계가 혈맹관계에서 보통의 국가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만류하고 대북원유 수출 중단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 이와 대조적으로 한·중 간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할 것이라는 뉴스가 회자되었고, 7월 초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중 협력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확대·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됨.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동아시아에의 관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말에는 트루트네프 부총리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경제 관련 다양한 합의를 내놓았음.

-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일본 카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을 줄이고,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하고자 함.

2. 일본 측 동인

1) 국내 정치기반 강화

○ 일본 입장에서 보면, 5.29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아베 총리가 국내정치적으로 북일 교섭을 활용하고자 한 데 있음.

- 아베 총리는 과거에 '납치문제의 스타'로서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최근에도 "총리로서 사명을 가지고 임기 중에 납치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음.

-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으로부터 납치문제의 조속 해결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내각참여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한 바 있음.

-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결정, 고노담화 검증 발표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앞두고 납치문제의 일정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고, 향후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북일 대화의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보임.

2) 전략외교 통한 국익 극대화

○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일관하는 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의 국익 확보를 위해 핵문제와 납치문제를 분리하여 납치문제의 우선 해결을 결단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적이고 영토 민족주의적인 언동을 우려하고 있고,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한 접근 및 대러시아 접근을 경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외교에서 유리한 입지를 추구해 왔던바, 5.29 합의는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전략외교의 성과물의 일부임.

3) 한·중 접근에 대한 견제

○ 북·일 합의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한중 접근 및 이를 통한 대일 압박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가능함.

–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인식과 조어도 영토분쟁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일본이 동북아 외교에서 고립되는 국면에서 북한 카드를 통해 한·중 연대에 대응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함.

– 북핵 관련 한·미·중 협력이 강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한·중 접근이 진전되어 한·중 연대를 통한 대일 역사압박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중 접근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접근했을 수 있음.

IV. 북·일관계 전망

○ 북·일 교섭의 향배는 북·일 양국이 납치문제 해결 조건에 합의하고, 최고 지도자가 이에 필요한 양보와 대국민 설득이라는 리스크가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달려 있음.

– '12명의 납치피해자'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히는가의 문제이며, 일본 측이 북한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납치 문제의 큰 구도가 정해질 것임 (〈표3〉참조).

<표3> **북 · 일 관계 시나리오**

안	내용
A	2008년 합의안 때처럼 북한의 납치조사가 중단되거나,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B	2004년과 같이 북한 체재 일부 일본인이 귀국하지만, 일본 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납치 재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C	북한 체재 일본인이 귀국함으로서 북·일 양국이 납치문제의 해결 종료에 합의하지만, 국교 정상화 교섭은 정체되는 경우
D	금번 합의조치 이행으로 납치문제 해결은 물론, 국교 정상화까지 도달하는 경우

○ 납치문제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북한이 일본 측이 납득할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대세이나, 납치문제의 일정 성과는 가능하다는 조심스런 낙관론이 있음.

– 특별조사위원회가 북한 측 인사만으로 구성되어 북한이 조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일본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조치가 제한적이고, 상황적 필요에 따라 북한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일본 내 여론은 회의론이 대세임.

– 반면, 금번 합의는 2008년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사전 준비와 조율을 거친 것이고, 일본의 교섭 패턴에서 볼 때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납치문제 해결 시나리오에 대한 일·북 간 잠정 합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납치문제의 완전 해결은 아니더라도 일정 성과는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 일본인 문제 관련 북·일 교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최초의 본격적인 교섭사례이며, 북한 관계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재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본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일정 성과' 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예정대로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2005년과 2006년에 일본 정부가 납치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2명, 일본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납치피해자

혹은 자진 입북자, 특정실종자 그리고 일본인 처 중에서 일부 생존자, 그리고 일본인 유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2002년에 사망자로 발표한 메구미 씨 등 8명 중에서 생존자를 인정할지가 일본 측 평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인바, 고(故) 김정일 위원장의 납치 관련 발언을 정면 부정하는 것은 북한 체제 특성상 기대하기 쉽지 않음.

- 이와 관련 지난 7월 1일 북·일 국장급협의에서 북한 측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복수의 납치피해자를 포함한 약 30명의 생존자 리스트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일본경제신문, 7월 10일자 조간), 일본 정부는 즉시 이를 부인한 바 있음.

○ 북한 측 발표에 일본인 생존자가 포함될 경우, 일본 정부는 이를 일정 성과로 간주하여 만경봉호 입항 등을 허가하되, 북한에 대해 계속 조사를 요구하고, 북한은 조사를 계속하여 내년 6월 전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큼.

- 지난 5.29 합의 발표 직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납치자 조사에 향후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음.

- 내년 국회일정 관련 예산안과 집단적자위권 관련 법안의 처리, 4월 동시지방선거의 실시, 10월 소비세 인상 가능성 등 내년 여름을 전후하여 주요 정치 현안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9월에는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 여부를 좌우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이에 맞추어 납치문제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함.

○ 북한 측 발표에 일본인 생존자가 포함될 경우 아베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생존자와 함께 귀국할 경우, 2002년과 2004년의 고이즈미 총리 방북 때와 같이 납치문제가 일본 국내정치의 최대 쟁점이 될 것임.

-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 둔 내년 6, 7월을 전후하여 아베 총리의 방북 가능성이 크지만, 오는 9월의 북한 측 발표 직후와 내년 6, 7월에 두 차례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일 간에 납치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일 국교정상화와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문제인바, 그 속도 조절은 미국과 중국 등 외부 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이 5.29 합의를 납치라는 인도적 문제에 한정하는 한 미국으로서는 반

대의 명분이 없지만,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부정하는 선까지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할 경우에는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임.

V. 시사점

1. 국제적 대북공조 이완 가능성

○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일본은 6자회담 참가국이지만, 북핵 해결보다 납치문제를 우선함으로써 국제적 대북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짐.

- 일본은 북핵과 납치, 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 및 국제적 대북 공조 중시의 입장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제를 유지하면서도, 납치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인 만큼 우선적 해결이 필요하고, 금번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조치에 의한 북한의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핵화 진전/납치 대립으로 일본의 외교적 고립 심화〉 보다 〈비핵화 답보/납치문제 진전으로 일본 대북 영향력 증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함. 실제로 2006년 전후 북한 에너지 지원에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에너지 지원에 불참한 바 있음.

- 향후 북·일 교섭이 진전되어 단계적으로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가 추가될 경우, 미국 등을 중심으로 대북공조체제의 이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북한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

○ 금번 북·일 교섭 과정에서 핵과 납치의 분리대응이라는 일본 정부 방침이 선명해진바, 북한이 비핵화 없이도 국제사회를 상대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내릴 소지가 있음.

- 일본 정부는 금번 북일 교섭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의 곤란과 국내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납치문제의 우선 해결을 추구하면서, 핵과 납치문제의 분리대응 방침을 명확히 함.

- 5.29 북·일 합의문에는 북한 핵 · 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며, 6월 하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의 북일 협의(베이징)는 예정대로 개최됨. 7월 13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납치문제 관련 북·일 교섭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결과적으로 금번 북·일 교섭은 북한이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유지한 채 국제사회와 교섭할 수 있다는 전례가 될 수 있음.

3.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및 남북관계에의 영향

○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관심을 갖고 영향력 증대를 추구한바,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이슈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 아베 내각은 '강한 일본', '주장하는 외교' 등의 담론과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등 적극적인 방위안보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안보이슈에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지역 강국의 등장을 의미함.

- 중국, 미국, 한국 등 주변국들의 대북 창구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북일 교섭은 일본의 대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함.

○ 북일관계가 진전될 경우 장기적으로 냉전 요소 청산에 따른 동북아 지역질서 안정 및 통일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남북한 관계와 북일관계 간의 상충 요인이 존재함.

-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북핵 비핵화 비용 분담, 북일 수교 시 경제협력 제공에 따른 대북 투자재원 및 통일 비용의 분담 효과, 남북한 교차승인 확대에 따른 지역질서 안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일관계 진전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중 중심의 대북공조 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Ⅵ. 정책적 고려사항

1. 전방위 전략외교 추구

○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경쟁과 협력의 외교게임이 가속화하는 동아시아 전략환경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외교가 요구됨.

-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경쟁, 중·일 대립, 한·일 갈등 구도 그리고 북·중관계의 냉각과 북·일 접근 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파워 밸런스 변화 속에서 역내 국가 간 관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지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대화채널 확보를 통한 전략공간 확대가 불가결한 바, 이를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추진이 중요함.

2.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

○ 북·일관계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 가능성에 대비하되, 과도한 예민 반응은 자제하여야 함.

- 납치라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은 인정하되, 북핵 관련 한·미·일 공조 중시 입장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는 투명성 있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해야 함.

- 일본의 대북제재 완화의 이면에는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복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바, 납치문제 및 북·일 수교 관련 급진전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3. 남북관계 성과 도출

○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의 북·일관계 진전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도적 대응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대북 5.24 조치의 기조는 유지하되,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재료로서 북일 교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한편 금번 북·일 접근을 계기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과거와 같은 북한 중시 노선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한·중 간 대북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한·일관계 신 패러다임 구축

○ 과거사 관련 경색된 한·일관계 타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일 영향력의 현실적 한계에 비추어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신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함.

- 한·일관계의 구조 변화에 따른 '1965년 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일본 정부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프레임에 속박되지 않는 한·일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동아시아 파워·밸런스 변화 속의 세력재편이라는 다자적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성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대일외교를 재정립해야 함.

Notes

Notes

Notes